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 패널토론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I):

은행업과 비은행업을 중심으로

2014.12.11.

정 지 만

한국금융학회가 일련의 시리즈로 마련한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심포지엄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이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패널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WEF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 122위, 대출자금 접근성(ease of access to loans)이 120위, 전반적인 금융시장 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도 80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BIS 비율은 14% 내외의 높은 수준이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WEF의 평가는 객관적 수치보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표상의 결함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볼 때도, 최근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2013년 ROE는 2.7%에 불과하며, 또한 Banker지의 2013년 세계 1,000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서병호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은행의 ROA는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인 0.38%로 86개 대상국 가운데 83위입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산업의 경우도 심각해서,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의 PF 대

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의 ROA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면서 2013회계년도에 그나마 다소 개선된 것이 -1.38%입니다.

이런 수치가 일시적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최근에 특별한 금융위기도 없었고 은행의 부실여신비율도 1%대인 상황이어서 금융업의 수익모델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정보를 수집/분석해 우량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및 비은행의 정보생산 기능도 낙후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을 수십 년간 답습하면서 질적인 발전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체계도 구태의연한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금융기관 인사 문제에서도 적절치 못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정책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 추진방식은 여전히 지난 수십 년간의 관치금융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무리하게 혹은 조급하게 추진하면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정책당국이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규제 감독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최근 은행 및 비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산업에서 수익모델이 악화되면 해당 기업이 도산하고 해당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금융업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차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위험한 영업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보전을 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최근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를 재인식하면서 미시적 규제감독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의 비용이 GDP의 수십 퍼센트에 달하고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은행 혹은 쏠림현상이 큰 금융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국은행의 공식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